

광주 區 경계조정 어떻게 되나

필요성 공감... 이해관계 조율이 관건

인구 떼어붙이기 외엔 대안 없어
본격 논의 내년부터나 가능할 듯

광주지역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동안 자치구 간 불균형 발전과 생활권 및 행정구역의 괴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어 수면 아래 잠복해있던 이슈다.

최근 동구와 서구의 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의석수마저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역량의 퇴조를 우려한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자치구 등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6년)에 걸리기 때문이다. 제18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만 4000명 미만을 다른 선거구와의 통합하고, 31만2000명 이상은 선거구를 분리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의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역을 대변해줄 수 있는 대표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지금은 이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북구의 인구는 광주시 인구의 32%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자치구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인구를 떼어오는 방안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지난 2006년에도 동구의 편입시도가 ▲해당 주민 반대 ▲국회·시·구의원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 ▲준비 부족 등으로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구간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다뤄야하며 5개 자치구와 광주시, 지역국회의원 등이 집단투표를 만들어 논의하는 구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는 시급한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중 서구갑과 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영택 의원과 박주선 의원은 적극적인 입장이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 의원은 "광주 자치구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가 북구 읍인 김재균 의원은 "광주의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구간 경계조정 논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회의원과 광주시, 자치구 등은 모두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었다.

따라서 구간 경계조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율해낼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해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연구개발특구 계획도



Table with 5 columns: 구분, 지구, 위치, 면적, 기능, 주요사업. It lists 7 zones with their respective areas and planned projects.

첨단 3지구 한·중·일 국제협력단지로

광주 R&D 특구 변경신청안...규모 51km²→18km² 축소

광주연구개발(R&D) 특구에 포함돼 새롭게 개발되는 첨단 3지구는 한·중·일 개방형 국제협력단지, 신룡지구는 그린 카 부품 모듈화 단지로 조성된다. 또 특구 규모는 예초 51.23km²에서 18.73km²로 줄어들며, 2015년까지 5년간 국비 4400억원, 시비 150억원, 민간자본 275억원 등 48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30일 "주민의견수렴, 지식경제부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광주 R&D 특구 변경신청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R&D 특구 면적은 5년마다 개발 수요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오는 2025년 3단계까지 사업비는 모두 1조 145억원에 이른다.

전체 부지 중 행정구역상 광주의 면적은 15km², 장성은 3.73km²이다. 광주시의 조성안에 따르면 신규 개발지인 첨단 3지구에는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을 위해 광주테크비즈니스센터와 산학융합센터인 녹색융합과학원, 팜토초 레이저, 사이언스빌리지, U-라이프케어, 차과산업클러스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신룡지구는 2곳으로 나눠 하이테크 금형, 의료 및 가전로봇단지, 3D 융합산업 클러스터 등과 자동차산업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첨단 1지구와 개발중이 있는 진곡산업단지, 장성 나노산업단지, 첨단 2지구 등에도 신규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조성안과 단지 규모는 지식경제부와 협의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이르면 이달 말 관련부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R&D 특구로 지정될 경우 ▲국가 예산 집중 지원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국제·지방세 등 감면 ▲고용보조금·입지보조금·투자보조금 등 지원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인허가 일괄제 처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구소 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국제인 소득세 법인세는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시세(의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 포함) 취득세·등록세 전액 면제, 구세 재산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5년마다 수립하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토지수요에 적합한 면적으로 구역을 확정하고, 수요발생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특구 조성에 따라 약 15조341억원의 장기간 경제 효과, 2만~3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불 밝힌 성탄트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광주기독교연합회(회장 송정용 목사)는 지난날 30일 광주시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2010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높이 26m 짜리 원뿔형 대형트리는 내년 1월 초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kpo National University featuring wind turbines and the text '신 해양시대의 리더!' (New Leader of the Ocean Age!). It lists university statistics and dates for admissions.

北선박 검색...대량살상무기 차단 훈련

한미연합훈련 사흘째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인 30일 양국군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 검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미가 서해상에서 진행한 연합훈련을 통해 WMD 의심선박 차단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연합훈련이 북한의 WMD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D) 훈련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재가와 공군기를 이용한 공중 침투 및 대응훈련, 항모감속작전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해상차단 작전은 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운항 정보 및 첩보를 공유한 가운데 한미 연합전력이 차단기동하고 전투기와 해상초계기, 링스헬기 등의 연호하에 선박으로 연합검색반을 투입한다. 이후 선박을 장악한 검색팀은 선박 곳곳을 정밀 검색하는 절차로 훈련이 진행된다"고 합참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공방어훈련, 공중침투 및 대응훈련, 항모감속작전, 해상자유공방전은 전날보다 참가전력이 확대됐다.

다수 항공기통제 및 공중요격질차 훈련은 한·미 양국 이지스함이 미 7공군 F-16C와 우리 공군 F-15K 및 K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합참 관계자는 "일반 구축함은 다수의 전투기를 통제할 수 없지만 세종대왕함처럼 첨단 지휘체계를 갖춘 이지스함은 가능하다"며 "이지스함이 다수의 항공기를 통제하면서 항공기에 요격지점을 하달하는 훈련이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시작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 의지를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1일 막을 내린다. /*연합스

연평도 사격훈련 연기 왜?

"北 도발 우려 취소"...합참은 부인

지난달 30일에 실시된다고 공지됐던 연평도 사격 훈련이 연기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예비일정 중 하나였는데 해병대 연평부대가 하루 전날 예고방송을 하면서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연평도 현지에서 전날 방송한 것과 관련, "연간 계획된 사격훈련을 실시

하기 위해 정한 가지 예비 일정 중 하나였는데 현지부대에서 잘못 이해하고 방송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단지 예비일정이었던 마치고 확정된 훈련일정처럼 연평부대가 "30일 오전 10시부터 사격훈련을 실시하니 섬내 모든 민간인은 9시30분까지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방송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합참 관계자는 "현지부대에 방송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현지

부대가) 여러 예비일정 중 하나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때문에 예정된 일정을 굳이 취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북한은 서해5도 지역의 사격훈련을 공개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켰다. 미측이 서해 연합훈련기간 중에 서해5도지역의 사격훈련을 자체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합참은 "일부 보도에서 미군의 요청으로 연평도 사격훈련이 취소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상조건과 연평도에 잔류하는 민간인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스